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 국민해킹사찰 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제 목 22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 국정원 개혁 청원서 제출해
날 짜 2015. 8. 20. (별첨제의 2 쪽)

보 도 자 료

22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 청원서 제출해 국정조사 외에 특별검사 임명, 국정원 감독통제제도 강화할 것 요청 조사검증에 불응하면 내년도 국정원 예산 삭감할 것도 요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해 22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아래 참조)은 오늘(8/20) 오전에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 마련’ 을 요청하는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 국정원이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조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2016년도 국정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국정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 △ 국정원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이번 해킹사찰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길 것, △ 국정원이 독립적인 외부기관 또는 국회에 의해 실질적으로 감독 또는 통제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국정원에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는 등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것입니다.
3. 지난 7월 9일에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국가정보원이 진상규명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분명한 국정원에 대해

국정원 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지 40여일이 되었지만, 국정원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할 생각이 없으며, 국정원에 대한 책임자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도 진상조사와 검증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이 상태로 흐지부지 끝낼 일이 아니라고 보는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서 국정원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아,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30일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 2,786여명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 1,122명과 함께 2차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오늘(8/20) 제출합니다. 2차례에 걸친 고발운동에 약 4천명의 시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국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 특별검사 임명, 국정원 개혁 의견청원서 공동 제출단체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이상 22개)

끝.

▣ 별첨자료 : 청원서